

# 한국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의 내포와 외연

손호철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87년 6월 항쟁이 이제 15년 지났다. 61년 5·16 쿠데타와 함께 시작된 오랜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의 시대가 열린 지도 10년이 흘렀다. 특히 군사독재에 대한 본격적인 저항과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된 19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한국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김영삼 전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양김이 지배해온 '민주화 대통령 시대' 10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민주화 대통령 시대 10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다른 것도 문제지만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의 스캔들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 비리 사건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운동 출신 대통령들의 도덕적 파탄에 국민들이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의 경력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명예가 아니라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두 민주화운동 출신 대통령들의 도덕적 파탄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은 불완전하지만 그나마 현재의 민주주의를 있게 한 원동력으로서 우리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다. 이 점에서 '민주화 대통령 시대 10년'을 마감하며 한국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성격과 성과, 그 현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이 글은 이와 관련, 흔히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온 한국의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을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무엇이 한국 민주화운동인가?

한국 민주화운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정의와 외연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자명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이하 민주화 보상법)이 통과된 이후 과거의 다양한 시국사범들이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민주화운동 인정과 보상 신청을 해오면서 개별 사안들이 과연 민주화운동인가 하는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서도 무엇이 한국 민주화운동이었는가 하는,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 민주화운동은 좁은 의미의 운동 내지 일종의 고유명사로서의 이해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이라고 불려 온 것으로서 군사독재에 대항해 절차적 민주주의 내지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전개한 저항운동을 지칭한다. 민주화 보상법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해 있어서 민주화운동을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상법 시행령은 보상법에 규정한 '항거' 를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해서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 하지만, "국가권력과 관계 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민주화운동을 좀더 체계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일상적 용법을 넘어서 한국 민주화운동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와 외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한국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세우고 확대하기 위한 운동"이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수행한 운동은 모두 한국 민주화운동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사실 이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를 다르게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과 이념들이 경쟁한 바 있다. 물론 소련과 동구의 몰락 이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파탄에 이르면서 이 같은 다양한 이론 중 정치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특권화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를 단순히 엘리트간의 공정한 경쟁의 보장으로 이해하는 슈페터 류의 최소주의적인 정의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이론적 정세이다. 그러나 긴말이 필요 없이, 민주주의가 단순한 엘리트간의 공정한 경쟁이나 정치적 민주주의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억압, 착취,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사회나 상태를 의미하며 이 점에서 “한국 사회의 모든 억압, 착취, 차별, 배제에 저항하는 운동”은 한국 민주화운동인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민주주의는 크게 보아 상호보완적인 네 가지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민주주의이다. 이는 단순히 직선제 같은 엘리트간의 공정한 경쟁의 보장뿐만 아니라 정치적 선호의 형성과 표현 기회에서의 평등, 즉 사상과 결사의 자유 같은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 문제이다. 다시 말해 직선제 같은 엘리트간의 공정한 선거 경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사상과 결사의 자유가 제약된다면 이 같은 정치 체제를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치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에 대한 슈페터식의 이해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로버트 달의 다두정(polyarchy) 수준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사회민주주의가 관심을 갖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이다. 이는 자유권에 대비되는 사회권의 문제로서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등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보존되어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권리의 문제이다. 셋째, 맑스주의와 같은 좀더 근본적인(radical) 좌파들이 관심을 갖는 민주주의로서 생산자 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이 생산자 민주주의이다. 모든 민주주의와 시민권은 공장 문 앞에 오면 멈추게 되어 있고 공장 안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방적인 지시, 복종과 지배, 종속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는 공장 전체정 체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을 자기실현 과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루의 노동과정을 끝내고 작업장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해방감을 느끼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작업장 독재에 저항해 생산자들이 스스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생산자 자주관리가 생산자 민주주의이며, 이런 문제의식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아무리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발달해도 기본적으로 반민주적인 정치 체제이다. 그러나 생산자 자주관리처럼 생산자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일부 진보적인 선진 자본주의의 경우 주요한 의사결정에 노동자들을 참여시키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제도화하는 형태의 산업민주주의를 실시해 온 바, 이는

생산자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포스트주의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상성의 민주주의이다. 포스트주의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민주주의는 단순히 국가나 자본 같은 거대 권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회적 관계들에는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보면 다양한 일상적인 삶의 제도화된 사회적 관계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문제와 연결된다. 즉,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젠더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소수자운동으로서 동성애자들의 권리와 같은 차이의 민주주의,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주장해온 학생운동이 함의하는 대학의 민주주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문제는 도처에 존재한다.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이해에 기초해 볼 경우,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듯이 민주화운동을 첫 번째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반독재투쟁으로 좁혀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세 번째의 생산자 민주주의, 네 번째의 일상성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노력은 모두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기본권을 위한 전태일의 분신, 작업장에서 군대식의 명령 체계에 저항한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저항, 남성 중심의 호주제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 유신 시절 장발단속에 저항한 대학생들의 저항, 규격화된 교복 제도에 저항한 고등학생들의 저항 등이 모두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민주화 보상법이 말하는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라는 현실 정치세력의 존재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1969년 이후의 운동으로 국한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운동에는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해서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하지만 “국가권력과 관계 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은 잘못이다. 물론 이 법안이 국가의 보상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국가가 보상 책임이 있는, 국가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경우로 국한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 법적 제한 필요성과는 상관없이 민주화운동을 단순히 국가권력에 저항한 경우로 국한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주화 보상법상의 민주화운동 정의는 해석상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

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넓게는 국민의 권리가 무엇이나, 좁게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무엇이나에 대해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우리의 헌법, 즉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통념과 달리 민주화운동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헌법은 신체의 자유로부터 양심의 자유(19조),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21조), 학문, 예술의 자유와 같은 소위 자유권만이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31조), 근로의 권리(32조), 노동 3권(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인간의 행복추구권(10조) 같은 사회권, 그리고 환경권(35조)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보상법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민주화운동은 단순히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군사독재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저항운동, 즉 위에서 지정한 첫 번째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관련된 운동만이 아니라 두 번째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운동, 그리고 세 번째의 생산자 민주주의 운동 역시 민주화운동이다. 더군다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행복추구권 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매우 포괄적인 기본권들을 고려할 때, 동성애자들의 인정투쟁 등 네 번째의 일상성의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 더 나아가 제일 앞부분에 지적한 모든 억압, 착취, 배제, 차별에 대한 저항이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도 민주화운동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같은 큰 원칙을 갖고 몇 가지 더 짚어 볼 문제가 있다. 우선 제3세계적 맥락과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성과 관련해 그 동안 한국 학생운동과 재야운동 내에서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해온 반미자주화와 통일운동의 문제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 이들 운동은 직접적으로 민주화운동과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포함한 현대 사회의 문제가 일국적 수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체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을 반드시 일국적 수준의 문제, 국내의 문제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즉 외세의 문제, 분단과 통일의 문제도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억압, 착취, 배제, 차별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위에서 지정한 다양한 민주주의와 기본권들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 또한 민주화운동이다.

다음에 짚고 넘어갈 문제는 합법성, 폭력성의 문제이다. 즉 민주화운동은 억압, 착취, 배제,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 일상성의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 다양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 추구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평화적 방법을 사용한 운동에 국한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방법과는 무관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민주

화 보상법 자체도 합법성, 폭력성 여부를 민주화운동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사실 민주화운동을 평화적 방법으로 국한할 경우,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80년 5·18 민주항쟁도 민주화운동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러나 일부 시각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와 폭력성이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폭력적 방식에 대한 저항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복잡한 논쟁이 필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폭력/평화학의 권위자 중 한 명인 요한 갈통이 잘 지적했듯이 폭력이란 단순한 직접적 폭력만이 아니라 반민주적 질서와 같은 구조적 폭력이고, 민주화운동 등 수많은 저항운동이 5·18 항쟁처럼 구조적 폭력, 나아가 군부의 강력한 직접적 폭력에 저항해 불가피하게 방어적인 직접적 폭력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폭력성 여부로 민주화운동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의도’와 ‘결과’의 문제이다. 즉, 민주화운동을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 운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한 운동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을 ①의도도 있고 결과적으로도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으로 국한하는 가장 엄격한 입장과, ②의도로 규정하는 입장, ③결과로 규정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보다는 행동의 현실적 효과인 ‘결과’이다. 그러나 결과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을 정의하는 경우, 특정 운동이 민주화에 결과적으로 기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현실적 기여도를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기술적 어려움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한 운동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전혀 민주화를 위해 한 행동이 아닌데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의해 민주화에 기여한 것은 민주화운동이 되고 마는 아이러니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박정희의 유신 선포와 민주헌정 탄압은 민주화운동의 성장을 자극하여 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민주화운동의 판단 기준으로 채택할 경우 유신 선포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야 하는 엉뚱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정반대로 단순히 참여자들의 주관적 의도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을 판단하는 것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의 내포와 외연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더 많은 분석과 연구를 필요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을 그

기본 원리로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논의는 포괄적인 방향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근거할 때, 앞에서 제기한 민주주의에 대한 네 가지 범주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내용을 둘러싼 논의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민주화운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민주화운동이 대체로 첫 번째에서 네 번째로 그 순서를 밟아 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 순차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런 범주들의 운동이 나무토막처럼 분리되어 존재해 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범주들의 운동들이 당대의 지배적 운동의 과제로 혹은 주요한 과제로 시계열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특징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기 구분, 운동의 성격, 주체, 대상 등과 같은 문제가 명료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연구 수준은 이를 논의할 정도로 풍부하지 않다.

민주화운동의 시기 구분과 관련, 민주화 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69년 3선 개헌 이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이미 지적한 대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헌법 위기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구 변혁운동과 무관하게 대중적 수준에서 하나의 실체로 부각된 것이 3선 개헌과 70년대 유신 체제 등장 이후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유신 체제가 공개적 독재 체제 혹은 파시스트적 억압 체제로서 일상의 모든 자율적인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민주화가 이 시기부터 절대절명의 과제로 부각됐다는 점도 이런 시기 구분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이지만 3공화정이 유신 체제보다 민주적이라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발상에 대해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닌데, 3공화정의 상대적 민주성은 박 정권 자체의 민주성에서 비롯됐다기보다 4월 혁명과 6·3 항쟁의 정치적 효과가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은 음미해 볼 만하다.

어쨌든 3선 개헌과 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동되고 유신 체제가 등장한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목표는 위에서 살펴본 민주주의의 내용 중 가장 협소한 엘리트간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경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구성 방식과 관련하여 대통령 직선제 여부를 둘러

싼 논의가 정치적 갈등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었던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70년 전태일의 분신 이후 국민 대중의 생활 등 생존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치적 쟁점으로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민청학련 사건 이후 각 부문별로 성장하기 시작한 민주화운동은 그 대중적 기반을 조금씩 넓혀가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런 기본 특징들은 그대로 지속됐다. 이런 특징은 이 시기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주체들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민주화운동의 주체는 재야, 학생 등 주로 비판적 성향의 자유주의세력들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제도정치세력과 재야는 그 이념, 지향 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투쟁의 방식이나 강도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인다.

두 번째 범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80년대이다. 물론 이 때도 민주화운동의 중요 과제는 5월 광주 민중항쟁을 질서시키고 들어선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파시스트 혹은 반독재 민주화에 있었다. 하지만 70년대 비판적인 자유주의 운동을 넘어서는 급진적인 운동세력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의 기본권과 생존권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그것은 단순히 주변적인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다. 특히 학생운동 출신자 중 다수가 노동현장으로 활동의 장을 바꾸고 이른바 노학연대투쟁, 민중생존권 지원투쟁을 전개하면서 민주주의를 정치적 민주화에 국한시켜 왔던 이전의 주요한 운동 흐름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이들이 민주변혁을 내세웠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민주화라는 과제를 방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미약하게 결집했기 때문에, 오히려 급진적 운동세력들이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했다. 오히려 이들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담보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은 실리적인 조합주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다른 한편 그것은 위에서 세 번째 범주로 지적한 공장 민주주의 문제로 표출되기도 했다. 물론 공장 민주주의의 실현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며, 특히 노동현장에서 진행된 운동의 목표가 어떤 수준의 작업장 민주주의를 목표로 했는가는 좀더 면밀한 역사적 추적과 분석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급진운동들은 자본이 노동현장에서 강제하는 전제를 극복하고자 했으며, 그 방법으로 최대 사회변혁까지 모색하기도 했다.



87년 6월 항쟁 시기까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자유주의적인 운동과 마르크스주의 등 비판사회과학,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다양한 운동들은 서로 경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독재투쟁을 매개로 느슨하게 결집되어 있었다. 특히 6월 항쟁기 대중적 지도부 구실을 한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그 대표적 예인데, 여기에서도 주도권은 아직 비판적인 자유주의적 민주화운동 세력이 행사하고 있었다. 이들 간의 갈등은 결국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을 경과 하면서 민주주의를 주로 정치적 제도의 개선 수준에 묶으려는 세력과 그것을 사회경제적, 공장 민주주의로 확장하고자 하는 세력들간의 긴장으로 표면화됐다. 그리고 이런 긴장은 이후 급진운동세력들이 자유주의적 운동세력들의 영향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도 내외에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공장 민주주의 운동은 자유주의적 정치 개방과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제도화의 길을 강화시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주주의의 네 번째 범주인 포스트민주주의는 이른바 87년 이후 민주화 이행과 동구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 이후 시민운동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이전의 운동은 국가권력과 자본의 전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조를 이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 또한 사회 변혁을 둘러싼 거대 담론이 주류를 형성했다. 포스트민주주의는 이 과정에서 잠복됐던, 혹은 새로이 형성됐던 문제들이 표면화되면서 주목을 받게 됐다. 환경 문제, 젠더 민주주의 문제, 이주노동자, 동성애자를 비롯한 소수자 문제 등이 그것이다. 물론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출현과 더불어 활성화된 한국의 시민운동은 근대적인 권리 목록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화와 맞물려 탈근대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그 해결을 위한 운동들 또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과정을 경과하며 그 내용과 형식을 달리해온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성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현재 이 네 가지 범주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흔히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이야기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수사학적 찬사와는 달리 또 다른 한계를 명증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오랫동안 고난의 행군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제 해결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혁명과 국민적 저항은 있었으나, 그 결과는 4.19에서처럼 '혁명을 비혁명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혹은 6월 항

쟁에서처럼 국민적 저항과 요구가 수동혁명으로 귀결되어 지배블록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되풀이했던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과제를 제기하는 과거의 차원에 머무르기보다, 그것을 매듭짓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 한국 민주화운동 연구의 과제들

이 글은 최근의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인정 여부 논쟁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화운동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외연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다. 또한 간략하지만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살펴봤다. 물론 민주주의의 내포와 외연을 둘러싼 문제, 그리고 각 시기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위상, 그것의 특징을 규명하는 문제 등은 그렇게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요구된다.

첫째, 이론적 수준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는 민주화운동 연구의 출발점이자 대전제가 되는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연구와 논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와 동시에 각 시기에 따라 민주화운동의 주체와 대상, 성격과 위상, 특징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할 때만이 전반적인 민주화운동의 '통사'를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는 이론의 차원에서 논의가 끝날 때 큰 의미가 없다. 민주주의는 운동을 매개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따라서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요구되는데, 그 과정에서 연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지금 민주주의의 과제는 근대적 과제와 더불어 탈근대(혹은 후기근대)적 과제가 착종되어 있다. 양심, 사상의 자유, 정치적 참여 같은 고전적인 일반민주주의의 과제, 사회권의 문제, 그리고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 노약자, 장애인 등 소수자의 문제 등이 중첩되어 있다. 이것은 운동의 다양성 차원에서 보면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운동의 분절과 고립을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이른바 민중운동진영과 시민운동진영의 긴장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쟁점 민주주의의 문제 등도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진지한 논의와 연대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물론 누가, 어떤 세력이 이 연대의 중심에 서게 될지는 미리 예측할 수 없으

나, 그 기본 원칙은 조합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해계모니적인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직접적인 운동 과제가 아닌 사안조차도 자기 문제화하여 해소하거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시킬 수 있을 때, '비동시성의 동시성'에 숨겨져 있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문제제기식 한계 또한 해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

손호철 shchul@yahoo.co.kr | 서강대 정외과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이며, 저서로는 『3김을 넘어서』, 『근대와 탈근대의 정치학』의 다수.